

대한민국 산업현장의 안전 주소와 정부의 감독 방향 전환 이해

2026년 산업안전 정책 추진 방향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광역산재예방감독과장 오현석

산재사망사고 = 현 정부의 중요한 국정과제

이재명 대통령 “첫 생중계 국무회의에서 산재사망사고 근절 강조”



PART 1.

현정부 출범 이후 그간의 추진 정책



PART 1-1.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란?

2025년 7월 23일

후진국형 사고* 예방을 위해 시행

* 추락, 끼임 등 5대 중대재해 및 폭염

전담 감독관 지정

- 지정 사업장(또는 건설현장) 1개소당 전담 감독관 지정,
- 전담 감독관은 사업장과 핫라인 또는 상시소통체계 구축

전담 사업장 산재예방 관리

- 과거 재해 이력, 위험기계보유 등 기준으로
- 안전관리부실이 우려되는 사업장 산재예방 관리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추진절차

1단계: 사업장 선정

고위험사업 및 건설현장 2만6천개소
(부울경 사업장 3,777개소 선정)

2단계: 전담 지정

사업장 전담감독관 지정

3단계: 공문 발송

자체점검표 발송
위험요인 자체 개선 촉구

4단계: 수시 소통

전담감독관-사업장 핫라인 통해
수시 소통체계 구축, 모니터링

5단계: 현장 관리

불시 현장방문 및 점검감독
12대 핵심 안전수칙 중점 확인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실시 결과

점검 대상 및 실적

- 총 4,129개소 대상 점검 실시 (당초 3,777개소 대비 점검율 109.3% 달성)

점검 결과(조치 건수)

- 시정조치 8,923건, 사법조치 6건, 과태료 부과 총 4억 7,475만원

확인 점검 및 감독(부산청)

- 1차 점검 이후 안전관리가 취약한 S등급 22개소, A등급 44개소에 대해 2차 확인 점검 및 감독 실시
- 시정조치 84건, 사법조치 3건, 과태료 부과 총 3,870만원

PART 1-2.

노동안전 종합대책

노동안전 종합대책이란?

2025년 9월 15일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노사정 협력의 필요성

현장 의견 수렴 후 마련

- 대통령 지시로 노사정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견을 수렴
- 영세사업장 및 취약 노동자 사고 예방에 집중

소규모 사업장 지원 확대

- 2026년 산재예방 예산 2조723억원 투입(잠정)

노동안전 종합대책 4대 주요 과제

1. 안전 사각지대 예방 지원 강화

- 10인 미만 사업장 사고 예방에 433억원 신규 지원
- 스마트 안전장비 확대, 안전지킴이 1,000명 투입

3. 노동안전 인프라 확대

- 산업안전감독관 증원
- 지자체 감독 권한 위임(30인미만 사업장)
- 민간 재해예방기관 역할 강화

2. 노사역할, 책무 확립

- 원하청 안전관리비 원청 확대
- 작업중지권 신설 및 요건완화

4. 제재 수단 도입

- 3명 이상 사망 시 과징금(영업이익 5%)
- 영업정지 강화, 공공입찰·금융 심사 시 산재 반영

노동자 참여권의 실질적 강화



함께 만드는 안전 현장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감독 참여 의무화
 -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행사 요건 대폭 완화
 - 위험성평가 단계에서의 현장 노동자 의견 반영 필수
- 노동자의 실질적 참여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 감시 인프라 확충

감시 인력 및 장비 확대

- 산업안전감독관: 2,000여 명으로 증원
- 입체적 감시: 드론 및 패트롤카 실시간 가동
- 디지털화: 실시간 사고 보고 및 AI 분석 시스템

하늘과 땅에서 동시에 현장을 지켜봅니다.



PART 1-3.

2025년 산재 사망사고 현황

| 2025년 산재 사망사고 현황[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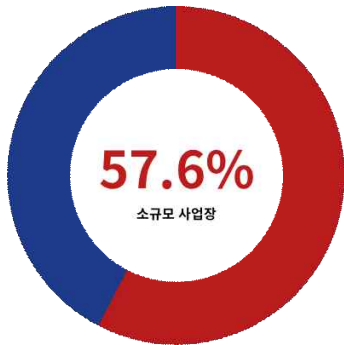
OECD 최하위권의 사고사망만인율(0.39), 여전한 '산재공화국'의 오명

605명
전국

127명
부·울·경

35명
부산

|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은 '소규모 사업장'



* '25년 사고사망자수 잠정통계

50인(억)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위기

- 2025년 전체 사망사고 중 349명(57.6%) 발생
- 대기업 대비 취약한 안전 관리 인프라
- 정부 지원 정책의 최우선 타겟으로 급부상

| 예방 가능한 '재래형 사고'의 반복

* '25년 사고사망자수 잠정통계



떨어짐 41.8%(253명)

안전대 미착용, 비계 설치 불량 등
건설 현장의 고질적 원인



맞음, 부딪힘 21.3%(129명)

지게차 및 중장비 작업 반경 내
인력 통제 미흡



끼임 8.5%(52명)

방호 장치 임의 해제,
정비 시 LOTO(잠금) 미실시

위 3대 사고가 전체 사망의 약 70%를 차지합니다.

| 산업재해의 막대한 경제적 손실

38조원

2024년 산재 경제손실액

(직접 손실액 + 간접 손실액)

산재보상보험금 생산중단, 대체인력 고용 등

- 국가 전체 예산의 약 5.8%에 달하는 천문학적 비용
- 단순 치료비를 넘어선 생산 중단, 숙련 인력 상실의 유기적 손실
- 재해율 증가는 직접적인 노동생산성 하락으로 직결

PART 1-4.

금년도 우리의 목표

| 2026년 부울경 사망사고 감축 목표

건설업 사망사고
40% 감축



부울경 사망사고
20% 감소

2025년 50명 ➡ 2026년 30명

2025년 127명 ➡ 2026년 100명

PART 2.

2026년, 산업안전 정책 무엇이 달라지는가?

PART 2-1.

감독 계획

목 표

• 위험 격차 없는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예방 및 규율 •

총 감독 물량
50,000개소+α
사업장 현장 접근 확대

감독관 인력
2,095명
수사·감독 인력 및 부서 보강

안전일터 지킴이
1,000명
소규모 현장 사각 해소

5대 핵심 추진 전략

- 감독 물량 대폭 확대**
◦ 2.4만 → 5만개소: 상시 패트롤 점검 체계로 현장 접근 확대
- 수시형-신속대응 중심 개편**
◦ 위험장후 포착 시 개입하는 전국 70개 패트롤팀 상시 가동
- 작은 사업장 집중관리 및 길목 확보**
◦ 영세 현장 대상 길목 찾고, 「사전계도-기술지원-감독-점검」 단계별 접근
- 노사가 함께 지키는 안전질서**
◦ 기초 수칙(안전모 등) 단속 강화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감독 참여
- 위험사업장에는 즉시 제재, 집중 규율**
◦ 행·사법처리 원칙 ◦ 중상해재해 감독 신설 ◦ 2차 감독 신설

산업안전보건 감독 기반

조직 및 전문 인력 확충

- 감독관 증원: 2,095명
* '25.1월 895명 → '26.12월 2,095명
- 조직 개편: 지방관서 40개 부서 신설
* 광역감독과, 산재감독과, 건설감독과, 중대수사과

감독관 전문성 제고

- 신규자 교육: 1,200명 이상
* 실습·체험 중심으로 조기 적응 지원
- 경력자 교육: 경력 단계별 전문 교육
* 형사법정 및 수사 실무 심화 교육

장비 보강하여 기동력 강화

- 패트롤카: 146대 → 286대
* 현장 대응·순찰 기능 강화
- 드론 감독: 22대 → 50대
* 벌목·지붕 등 고위험 지역 관리

민관 협력

- 안전일터 지킴이: 1,000명
* 추락사고 다발 공중 투입
- 안전공단: 순찰 및 기술·재정 지원
* 위험사업장 감독 연계

2026년 산업안전보건 감독 추진 전략

- 감독 물량 대폭 확대
- 수시형-신속대응 중심 개편
- 작은 사업장 집중관리 및 길목 확보
- 노사가 함께 지키는 안전질서
- 위험사업장에는 즉시 제재, 집중 규율

산업안전감독 주요 내용

1. 예방형

상시 패트론펙점

- ▶ 관내 위험 징후 상시 모니터링
- ▶ 신규 사업장 + 소규모 사업장 + 최근 일정기간 내 점검·감독 실시사업장

「작은 사업장」 집중감독·점검

- ▶ 영세 사업장 안전관리 강화
- ▶ 사전 계도 기간 내 기술·재정지원, 이후 집중감독 실시
- ▶ 지붕·발목 등 중대재해 급증한 초소규모 고위험 사업장

주제별 감독·점검

- ▶ 위험요인별·시기별 특성에 맞는 주제별 감독·점검
- ▶ 공사규모별 건설현장 감독, 폭염 취약 사업장 감독, 고독성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점검, 외국인 다수 고용사업장 합동점검 등

기획감독

- ▶ 중대재해 다발 기업·업종 등 적시 관리

강조주간운영 현장 집중 점검 주간

- ▶ 공단·민간기관 총동원하여 월단위 시기별 위험요인에 대응하고 경각심 제고

2. 사후형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감독

- ▶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이행실태 전반을 확인

중상해재해 발생 사업장 감독

- ▶ 최근 3년간 중상해재해*가 2건 이상 발생한 사업장
- ▶ 중대재해에 준하는 강도 높은 감독 실시
* 91일 이상 휴업 사고성재해

2차 감독

- ▶ 일정 기간 내 감독 실시 사업장 중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업장
* 예: 위험기계기구 다수 보유, 위험성평가 미 실시 등 안전관리 역량 부족, 시정조치 이행결과 추가확인 필요, 최근 1년 내 중상해 재해 발생 등

연계감독

- ▶ 공단·민간재해예방기관·지자체 통보 위험·불량 사업장

특별 감독

- ▶ (대상) 동시 2명 이상 사망, 1년 이내 3회 사망, 명령 위반으로 중대재해 발생
- ▶ 근로기준+산업안전 통합 실시 원칙으로 엄정 대응

* 출처: 2026년 안전보건 감독계획

산업안전 감독 물량의 대폭 확대

2025년 (기준)

2.4만 개소

2026년 (목표)

5.0만 개소+

접근성 강화

감독관 1인당 담당 사업장 수 최적화로 밀착 관리

전수 점검 체계

위험 사업장에 대한 빈틈없는 스크리닝 실시

'정기'에서 '수시 · 패트롤' 중심으로

70.8%

수시형 감독 비중 확대

- 예고된 감독에서 위험 징후 즉시 개입으로
- 불시 점검 강화를 통한 상시 안전 유지 유도
- 패트롤카를 활용한 광역 순찰 시스템

건설현장 안전확보를 위해

패트롤카 출동!



건설현장 사망자의
60%가 추락사

추락사고의 75%는
중소건설 현장 발생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패트롤 점검으로
살살히 살피고 밀착 관리하겠습니다.



민관협력 체계 구축

1. 고용노동부

- 고위험 사업장 점검, 감독 확대
- 불시 패트롤 점검

2. 지방정부

-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점검, 감독
- 지역별 위험요인 예방활동 전개

3. 민간

- 민간안전 지킴이 상시순찰
- 민간재해예방기관 기술지도

- ☑ 고위험 사업장 점검·감독 확대
- ☑ 불시 패트롤 점검 신설

- ☑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점검·감독
- ☑ 지역별 위험요인 예방활동 전개



- ☑ 민간안전 지킴이(1천명)
→ 상시순찰(18만 개소)
- ☑ 민간재해예방기관
→ 기술지도(33만 개소)

* 출처: '25.9.15. 노동안전종합대책

| 중상해 재해 관리 체계 신설

90일
요양 기간 기준

중대재해의 전초 단계 집중 관리

- 사망 사고는 아니지만 90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중상해 재해'
- 해당 사업장에 대해 즉각적인 예방 감독 신설
- "운이 좋아 안 죽었다"는 사업장도 이제 감독 대상입니다.

불량 사업장 경제적 제재 강화

제재 항목	적용 기준	상세 내용
과징금 부과	연간 3명 이상 사망 시	영업이익의 5% 이내 부과
공공입찰 제한	중대재해 발생 및 개선 불응	공공기관 발주 사업 참여 금지
산재 보험료	안전 등급 불량 판정 시	보험료를 할증 적용 및 지원 배제

*** 사고는 곧 기업의 재무적 리스크입니다.**

PART 2- 2 .

소규모 사업장 소통체계 구축

업종별 협의체를 통한 '길목 확보'

타겟



'맛있는 당근과 매서운 채찍'을 적재적소에 선택적 활용

소통체계 구축을 위해 2026년 1월 28일 중앙정부, 지방정부, 업종별 협의체 MOU체결

업종별 협의체 MOU 체결[26.1.28.]



**부산 소규모사업장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업 무 협 약 서**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이하 '노동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부산광역시본부(이하 '공단'), 한국선박수리공업협동조합, 부산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 부산시기계공업협동조합, (사)부산항만산업협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부산시회(이하 '협의체')는 상호 이해 및 신뢰를 바탕으로 부산지역 소규모 사업장 사망사고를 감축하고, 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노동청, 공단, 협의체가 부산지역 소규모 사업장 사망사고 감축을 위하여 안전관리에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실질적인 사고 예방 조치 전달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협약기관은 상호 협력 과정에서 각 기관의 규정을 존중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협력 분야와 기관별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제3조(협력사항) 협약 기관은 다음 사항에 대해 공동으로 노력한다.

1. 산재 예방을 위한 각종 지원 제도 및 정책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상호 협력
2. 협의체 소속 소규모 사업장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Hot-Line) 구축
3. 소규모 사업장 밀집 지역 대상 합동 안전홍보 및 캠페인 전개

제4조(협력의무) 협약기관은 업무협력을 위한 상대방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2조의 기본원칙에 입각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한다.

제5조(유효기간) 본 협약은 협약기관이 상호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협약 종료에 관련한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협약의 유효기간은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한다.



2026. 1. 28.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청장 김준휘 <i>김준휘</i> 부산시기계공업협동조합 이 사장 성기인 <i>성기인</i>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부산시회 회장 김병직 <i>김병직</i>	한국선박수리공업협동조합 이 사장 김귀동 <i>김귀동</i>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부산광역시본부 본부장 정종득 <i>정종득</i>	[사]부산항만산업협회 회장 안경호 <i>안경호</i> 부산조선해양기자재 공업협동조합 이 사장 최금식 <i>최금식</i>
--	--	--



소규모 사업장 소통체계 구축안

1단계: 계도, 홍보

- 업종별 위험요소, 필수 안전조치, 재정지원 등 사전고지
- 사업주, 근로자 대상 안전교육<안전보건공단>

2 단계: 재정, 기술지원

- 일터 지킴이 투입, 재정·기술 지원<안전보건공단>
- 지중해 사업<부산,경남>과 연계를 통한 선제적 지원

3 단계: 점검, 감독

- 1,2단계에 대한 개선불용 사업장 대상 불시 확인 점검·감독
- 취약노동자(외국인,고령자) 다수 사업장 대상 상시 점검·감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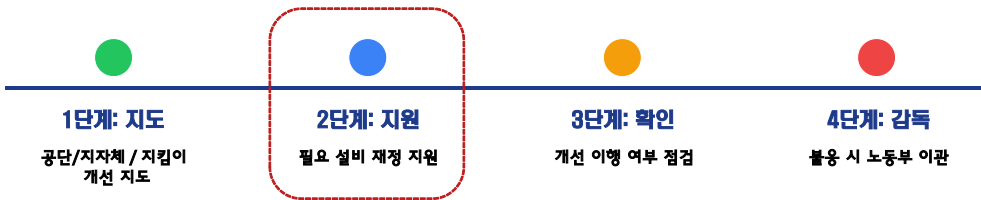
PART 2-3.

작은 사업장 관리

기술 · 재정 지원과 감독의 연계

대상

-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3,000개소)
- 영세, 1인, 가족사업장에 집중



"先지원 後단속" 원칙 - 개선할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복잡한 절차 없이 지원, '킵패스'

2단계: 지원



즉시 점검

정부 또는공단 전문가가
현장 방문 후 개선 사항 발굴



서류 간소화

복잡한 사업 계획서 대신
점검 결과표로 갈음



신속 지원

시설 개선 비용 즉시 승인 및
재정 투입

| 10인 미만 사업장 파격 지원

● 2단계: 지원

90%
설비 도입 비용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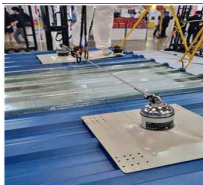
초소규모 사업장 맞춤형 재정 지원

- 추락·끼임 예방 설비 도입 시 국가가 90%(기존 50~80%) 부담
- 안전 투자 여력이 없는 소기업을 위한 Safety Net
- 시스템 비계, 방호 장치, 자동 정지 센서 등 포함

10인 미만 사업장(50억 미만 건설 현장)의 추락·끼임·부딪힘 3대 사고 예방 지원 대폭 확대('26년(안) 433억 원 신설)

최첨단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

2단계: 지원



(추락: 지붕 안전대 부착설비)



(끼임: 방호덮개)



(부딪힘: 인체감지센서 경각 장비)



(스마트: 세이프티 볼)

지원규모 및 자옴품목 확대('26년(안) 370억원)

- 지붕 안전대 부착설비
- 구동부 방호덮개
- 지게차 인체감지: 작업자 접근 시 자동 정지
- 스마트 세이프티 볼: 밀폐 공간 유해가스 실시간 측정
- 웨어러블 장비: 근력 보조 및 추락 감지 센서

도입 예산 지원 한도 대폭 확대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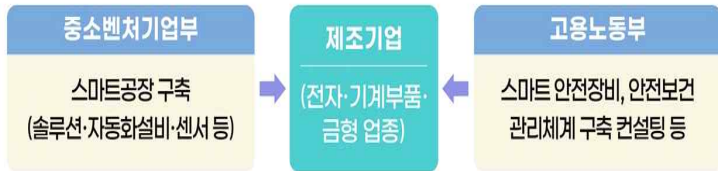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

2단계: 지원

자동화 설비 · 스마트 안전 장비 등을 통해 현장의 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부처협업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26년(안) 300억 원)

[부처협업형 산업안전 스마트공장]



산재예방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2단계: 지원

- 안전시설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범위 확대[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 (現) 건물·건축물, 비품, 운송구는 세액공제 미적용 원칙이나, 조세특례제한법상 안전시설은 허용
→ (改) 조세특례제한법상 허용되는 안전시설 범위 확대

- 노사단체 · 유관부처* ·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산재예방 우수 기업발굴 · 선정 → 모범 사례 확산

* (예시) 기업재해경감 우수기업(행안부),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경기도)

우수기업에는 세무조사 유예, 근로감독 면제, 정부포상 시 가점, 정책금융 금리 · 한도우대,

정책지원 시 가점 등 혜택 제공



외국인 노동자 고용제한 강화

2단계: 지원

- 외국인 사망사고발생 시에는 전부 3년간 고용 제한*, 중대재해에해당하는 질병, 부상등은 1년간 고용 제한 적용
 - 건설업고용 제한단위를 '현장 → 사업주 단위'로 변경해 산업재해 발생, 불법체류자 고용 시 제재의 실효성 제고
- * 고용허가 단위도 사업주 단위로 일치시켜 외국인노동자 현장 간 이동 원활화(유예기간 부여)

고용 제한 기준	현행	개선
1년	산재 사망사고 발생	사망 이외 외국인 중대재해 포함 * 3개월 이상 요양자 2명 이상 발생 재해 등
3년	산재 사망사고+ 500만 원 이상 벌금 확정	외국인 산재 사망사고 발생

| 나누어 쓰는 전문가, '공동안전관리자'

● 2단계: 지원

안전관리자 채용이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을 위해

지역산업단지 공동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

- 위험성평가 기술 지도
- 안전보건 교육 지원
- 현장 순회 점검 및 상담

업종별 협·단체 등에서 공동안전관리자를 채용하여,
안전관리자 채용의무가 없는 소규모 사업장(50인 미만)에 월 1회 이상
방문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 등을 지원



PART 2-4.

지 중 해 사 업

| 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 사업

지중해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지방정부와 함께하는

「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 사업



지중해 프로젝트란?

- 중앙정부 + 지방정부 → 촘촘한 중대재해 예방시스템 구축
- 지역의 '작은 사업장'을 위한
 - ✓ 공동 안전관리자 지원
 - ✓ 지역의 사고 다발업종 지원
 - ✓ 안전 취약계층 지원

143억원
특임 예정

| 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 사업

수리조선·기자재산업 재정지원사업

• 환경설비개선 및 시스템 구축

↳ 고위험 작업 환경 개선, 충돌경보시스템,



•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10개사 지원(180백만원)

• 기업·공급사 선정 → 매칭 → 설치·점검

지방정부의 주요사업은?



부산광역시

뿌리산업·창고 항만 물류·수리조선의
산업재해 원천 차단!

뿌리산업

노후정바·고위험설비 등
정비개선 중심 지원

창고·항만·물류

야간작업 환경,
전기·소방설비 개선 지원

수리조선·기자재

밀폐공간 작업,
가스누출 탐지 시스템 지원

안전취약인력
교육지원

외국인 언어·안전교육
국적별 시각
안전 표지판 설치 등



문의는? 부산시청 일자리노동과 051-888-6432, 6433

PART 2-5.

갈매기 산업안전 특공대

부산 관내 소규모 사업장 사망사고 근절을 위한

부산노동청·안전공단 갈매기 산업안전 특공대 발대식



부산지역 산재예방을 위해

2026년 2월 10일

「갈매기 산업안전 특공대」 출범

갈매기 산업안전 특공대

WHY 갈매기인가?

갈매기는 평소 집단생활하고 순한 특성을 보이거나 먹이(목표)를 구할 때는 공격성을 보임

– 이에 착안, 사망사고 감축이라는 목표달성을 위해 집단적(감독관, 공단, 지킴이)으로 적극 임할 예정

갈매기 특공대의 역할

부울경 감독관 139명 및 안전보건공단 직원 45명

지킴이 174명(건설업 108명, 제조업 24명, 조선업 42명) 등 총 358명의 갈매기 산업안전 특공대

2026년 소규모 사업장 대상 약 4만개소 패트를 점검 예정

PART 4.

당부의 말씀



12대 핵심 안전수칙 준수

추락 방지

비계 작업 발판, 안전난간 설치,
안전대 착용

끼임 방지

기계 방호 장치, 정비 시 전원 차단
(LOTO)

부딪힘 방지

지게차 후방 카메라,
전담 신호수 배치

위 수칙 위반은 타협 없는 단속 대상입니다.

위험성평가의 실무적 정착



서류가 아닌 '행동' 중심

- 노사가 함께 현장의 아차사고 찾기
- 발견된 위험 요인에 대한 즉각적 개선 조치
- TBM(작업 전 회의)을 통한 정보 공유

핵심 점검: 평가 결과가 현장에 반영되었는가?

| 2027년 위험성평가 과태료 부과 조항 신설

미 실시 시 과태료

1,000만원

〈시행예정일〉

1. 50인(억)이상 사업장 대상: 2027년 1월 1일
2. 전 사업장 대상: 2028년 1월 1일

지금부터 체계를 잡아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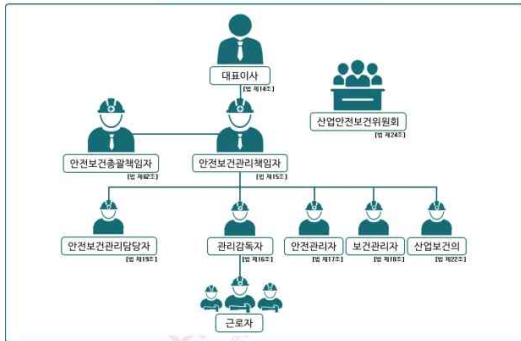
- 2027년부터 자율에서 강제/처벌 체계로 전환
- 단순 미 실시뿐 아니라 내용 부실 시에도 제재 가능성
- 2026년은 체계 구축을 위한 마지막 '골든 타임'

안전보건관리체제의 정상 가동

기능이 작동하고 있는가?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실질적 현장 관리
- 관리감독자의 역할 수행 및 권한 부여
-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의 투명성

시스템이 멈춰 있다면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도 불가능합니다.



개인보호구 착용의 철저한 관리



노사 공동의 책임

- 사업주: 인증된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지시
 - 노동자: 지급된 보호구 필수 착용 의무
 - 위반 시 사업주뿐 아니라 노동자에게도 엄격한 행정 조치 병행
- 안전모 하나가 생사를 가릅니다.**



안전 Key-message 상사·노출 요청

Busan is safe, 갈매기 산업안전특공대와 함께!

현수막 시안



활용 예시
(AI생성이미지)



지하철 승강장



기차역 대합실



사업장, 공사현장 등

Thank You

안전은 비용이 아니라 기업의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Any Questions?



사업장 중대재해 사이렌 가입

